

본지 200호를 기념해 가진 '환경기술인력 육성 및 수요 창출 방안 대토론회' 중 지난호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내용을 실습니다. (편집자 주)

목 차

주제발표(좌장 이상은 교수)

- 환경기술인력육성 및 수급관련 정책방향
- 환경부 백규석 환경기술과장
- 환경기술인력 국내외 수급현황 및 대책
- 김학명 (주)콘테크 대표이사
- 환경기술인력 육성 방안
- 이무춘 연세대 교수

지정토론

- 조중래 (주)SK 환경안전부장
- 장준영 환경기술인연합회 4대회장
- 장세균 국회 환경보좌관
- 황홍규 교육인적자원부 조정1과장



이상은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환경기술인력 육성과 수요창출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토론 1 - 조중래 (주)SK 환경안전부장

산업체 필요인력 따로 있다

저는 환경산업체가 아닌 일반 대기업에서 환경관련 업무 분야에 요구되는 기술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 환경기술인력육성 방안은 곧 환경 산업육성방안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이 잘 발달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환경시장이 코스트드라이브마켓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테크놀러지드라이브마켓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값싸게, 빨리 이 환경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에 대한 방향으로만 가다 보니 제대로 된 환경산업이 육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탄탄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이 발전해야 장기적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데 그 안되는 이유가 정부의 인플스먼트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플스먼트라 하면 강력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그 규제를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강하게 관리하여 환경산업이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간 국내 환경산업 보호를 위해서 환경산업 문호개방을 해야 할 것이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왔는데, 제 생각에는 과감하게 문호개방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양질의 선진 환경기술이 들어오면 양질의 환경 기술은 경제적인 환경개선 효과에 연결된다고 생각할 때 당장에는 국내 환경산업에 문제가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건

“기업이 원하는 환경기술인은 첫째 법규만족, 둘째 회사실정에 맞는 환경경영체제구축, 셋째 현공장내 환경 문제 해결, 넷째 회사생산제품들의 환경성과 대체, 다섯째 대외환경문제 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법률 및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능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강한 환경산업체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의 주제 발표 중에 이무춘 교수께서 다단계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산업체에 있는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단계 교육을 넘어서 학과간 연계, 환경공학이나 기계공학과의 과 간의 한계를 과감히 철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를 환경으로 들어왔지만 수업의 80%는 화공이나 기계공학에서 듣는 이러한 인터디시플리너리 교육이 활성화 되면 환경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취직이 잘 안되는 그런 현상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입장에서 봐도 환경공학과를 전공한 사람은 화학공학이나 기계공학 전공한 사람이 일하는 자리에 갈 수가 없지만, 기계공학이나 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은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의 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환경공학이라는 전공꼬리표 때문에 환경공학을 한 사람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이러한 인터디시플리너리 교육을 통해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환경기술인은?

다음으로 현재 대기업 환경분야에서 요구하는 스킬, 업무 내역을 제조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법규만족입니다. 이것이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가장 큰 환경분야의 능력이지요. 대기업 경영진이 환경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일은 법규만족과 법규만족에 드는 규제비용의 최소화입니다. 물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향후 예상되는 법규를 잘 파악하고 미리미리 거기에 잘 대응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지요.

두 번째는 회사실정에 맞는 환경경영체제의 구축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따라 환경감사를 실시하고 환경감사결과와

그 회사의 환경성과를 잘 나타내는 환경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외에 어떻게 잘 알릴 것인가 등이 경영진들이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선진경영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EP, LCA, 환경회계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관리입니다. 환경관리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공장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환경문제의 해결, 이것은 일반적으로 프로세스 환경관리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좋게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환경운전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고 기록화해, 이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나 민원, 법규만족여부라든지 종업원의 건강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것들이 공장가동과 관련해서 나오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장가동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은 점점 더 포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커가는 부분이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환경성과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덕트 인바이러먼트 퍼포먼스입니다. 저희 회사를 예로 들면 휘발유·경유를 생산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유해물질인 황이나 벤젠 등이 얼마나 많이 함유가 돼서 유통과정 및 소비과정에서 대기나 인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냐, 이러한 영향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대기업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말하던 환경관리 부분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환경성을 어떻게 좋게 가지고 갈 것이냐가 화두가 되고 있죠.

다섯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해관계자 관리입니다.

모든 환경문제에 있어서 환경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의 대표성을 가지고 접촉을 해야 하는데, 일반소비자, 민원,

학계, 소비자, 언론, 정부, 기업, 관공서, 엔지오 등 이들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에게 회사의 상황과 실정을 어떻게 잘 설득을 시킬 것인가가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회사 내의 종업원이나 협력업체,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대외기관에 대한 리포팅 등 이런 대 여섯 가지의 기술, 기능이 대기업 환경부서에서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이런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환경기술인력은 어떤 소양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엔지니어링 지식 을 가진 환경기술인력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해결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환경은 복잡 다양성을 가진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단순 기능인력 하고는 차이가 있는 복합적 사고, 분석능력을 갖추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리포팅, 기획, 프리젠테이션, 토론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폭넓은 경영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존재목적 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죠.

세 번째로 법률 및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능력 이것이 환경 인력에 대한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의 환경 관리는 정부정책 및 법규 재개정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폭넓은 정부정책 및 법규이해는 물론 이러한 것들이 기업의 효율적 환경관리 역량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교섭능력, 협 외능력 및 이론능력을 갖춘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론 2 - 장준영 환경기술인연합회 4대회장

환경기술인력 육성책보다 수요창출을 위 해 더 많은 고민해야

오늘 토론회가 환경인력 창출은 많은데 인력의 공급이 못 따라줘서 고민하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 해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앞서 발표내용을 보면 현재 환경기술인력은 배출된 인력 에서 30~40%만 수요가 되고 나머지 60~70%는 인력이 남 아도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남아도는 인력을 어떻게 할 것 인가.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한 수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은 인력을 배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2세대, 3세 대 기술 즉 복원기술, 사전예방기술, 청정기술 이런 기술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가 토론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요창출은 정책이 할 수 있는 것

실질적인 얘기를 하면 수요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이 라든가, 학계 및 교육계에서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책이 따라서 많은 인원의 수요 창출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인원이 사장될 수도 있다고 생각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수요창출은 결과적으로 법이 마련 된다는가, 제도가 마련되어야만이 수요창출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껏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의 발표를 보면 거의 그동안의 우리 인력이 학교에서 또는 자격제도에서 현실에 맞지 않게 인 력이 양성이 되었고 2세대, 3세대 인력양성이 소홀히 되어 왔기 때문에 수요창출이 안되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인력 업무고용제 완화는 환경산업발전의 걸림돌

수요창출은 환경부나 정부에서 정책을 창출하고 입안해 나가면 거기에 따라 인력 수요가 창출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 97년 기업규제 완화라는 명목하에서 환경인력 업무고용제를 대폭 완하시켰습니다. 그로인해 거의 40~50%의 환경인력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IMF라는 특수한 상황과 겹쳐있긴 했어도, 어쨌든 자의든

“기술에 관한 정보는 정부보다는 학계나 연구소가 빠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은 이곳에 맡기면 되고 현장교육은 20년~30이상 현장에서 노하우를 쌓은 환경기술인연합회 등과 같은 협회에 맡겨서 실무 위주의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교육은 실제로 경쟁도 시켜봐야 합니다.

환경부는 인력양성을 위해 인력센타를 세우는 것보다 예산을 지원하여 학계나 단체, 연구기관 등에 교육을 맡기고 현실적인 수요창출에 관한 정책을 만드는 데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타의든 많은 환경인력들이 일자리를 잃었지요.

또한 발표자료를 보면 방지시설업 이라든가 환경사업이 취약하다고 하는데, 이는 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산업 중에서 특히 방지시설업은 제도적으로도 기술로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엔지니어링티도 없는 기술산업이 기술이나? 그렇게 제도적으로 지금껏 발전을 못하도록 막아왔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우리나라 제도는 방지시설업체 등이 용역 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부에서 담당하던 상하수도 사업이 환경부로 넘어오긴 했으나 그러한 큰 사업의 설계나 시설은 거의 다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정책이 환경인력육성 방해하고 있어

또한 그러한 관리 용역은 환경부산하단체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업들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취약한 것이 제도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지시설은 기업체의 의무교육, 완화와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IMF 전후 70~80%의 방지시설업이 도태되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N-P제거라든가 제도가 정책이 입안이 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이 창출이 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도화하겠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안을 내고 토론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환경영향평가서 해야 합니다. 이는 이치적으로나 시기적으로도 맞고 그로 인해 새로운 환경인력이 나아갈 수 있는 물꼬를 트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왜 안되었느냐 하면 환경부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창출은 인력을 몇 개

년 계획을 세워서 양성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정책을 통해서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오늘 발표내용은 피부에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온 대안으로 환경기술인력센타를 세우고 진흥위원회 기능을 확대하며, 종합환경연구단지인 에코벨리를 형성하고 또한 지역환경개발센타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환경부 몸집 불리기 육성정책 안돼

이렇지만 이러한 정책이 환경부의 몸집 불리기에 해당되지 않는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불어난 몸짓에다 이 제도를 끼어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환경부는 거창하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당장 수요창출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력양성문제에서 학교라든가 자격제도가 현실에서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경기술인연합회 차원에서도 그간 학교에 커리큘럼이나 근본적인 환경교육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많이 건의를 했었고 질타도 했었습니다. 어떤 때는 환경학과라는 것이 필요한가도 얘기를 했었지요.

또한 기술자격제도 개선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학교제도나 자격제도가 잘못되서 지금의 수요창출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점도 개선해야 하나 학교제도나 자격제도는 우리가 전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담당하는 업무능력을 기준에 맞춰 양성하는 것입니다. 기술자격증을 따고 전공을 했다고 해서 바로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선반기능사나, 용접기능사 또는 워드프로세서 기능사는 바로 현장에 적용을 할 수 있으나 엔지니어라든가 매니저먼트 등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이 어떻게 오늘 자격증을 따서

내일 현장에 적용을 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이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제도를 개선해야겠지만 현장에서 마치 선반기능사나 용접기능사처럼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달라 이것은 현장에 무리한 요구입니다.

마치 이것은 오늘 운전면허 났는데 내일 영업용 택시운전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전문가라는 것은 이런 자격증이나 전공을 해서 몇 년동안 현장에서 경험도 쌓고 연구도 하면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가를 기업에서 원하면 경력자를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교육제도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동안의 법정교육을 보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20년 전부터 지금 교육이 현실에 맞지 않고 관계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현장과 뒤떨어진다고 건의를 수십 차례 해왔는데 이체서야 개조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기술인력센터를 설립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맞춤형교육이 뭐냐,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전공을 취득하고 졸업했을 때 현장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자격증이나 학교교육에서는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하니까 뒤에 취업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업무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 맞춤형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도 지금 환경부에서 다 진행하겠다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세대, 3세대 기술에 관한 정보는 정부보다는 학계나 연구소가 빠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은 이곳에 맡기면 되고 현장교육은 20년~30이상 현장에서 노하우를 쌓은 환경기술인연합회 등과 같은 협회에 맡겨서 실제적인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교육은 실제로 경쟁도 시켜줘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환경부는 인력양성을 위해 인력센터를 세우는 것보다 예산을 지원하여 학계나 단체, 연구기관 등에 교육을 맡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환경부는 실

제적으로 수요창출에 관한 정책을 만드는 데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론3 - 국회 장세균 보좌관

환경기술인력 대우 받게 하자

앞의 장준영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쏙쏙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이 토론회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환경기술인력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이 기술인이 마음 놓고 능력을 발휘하여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냐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4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환경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중에 전혀 거론이 안 되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셋째 기업경영인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기술인력을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넷째 기술인력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는 우대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실정이죠.

기술인력 천시풍조 여전

우선 환경산업계 및 기업, 공무원, 교수님들에게 환경공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써먹을 데가 없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환경인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특징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전문성도 없고 현장적응 능력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환경분야에서도 환경공학과 출신이 배치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환경기술인력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어야만 전문기술인력이 양성되고 환경산업도 육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쌓으면 뭐하나 마땅히 갈 곳도 없고 기뻐야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한다는 식의 자조 섞인 탄식이 나오지 않아야 우리 환경산업이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할 것이라 봅니다.”

공급자 위주의 교육 현실성 없어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대학이 실용기술교육이 아니라 현장에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공급자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교수님께서도 현재 대학교육의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를 인식하고 고민하고 계시니 이러한 문제들이 빨리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선진국 환경기술을 살펴보면 사후 처리기술은 이미 완성단계에 접어들었고, 환경보전과 위해성 관리기술을 넘어서 이제는 IT, ET기술을 접목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아직 우리 교육은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없이 환경기술인력 공급과잉 사태

또한 실질적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나가본들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기업에서도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학에서도 경쟁적으로 환경공학과를 신설하고 거기에 따라 지원자도 엄청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공급과잉이 되었고 그를 수용할 수 있는 산업계기반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 지망생들은 취업이 얼마나 잘 되는 방향으로 몰리게 되었죠. 환경이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전공을 선택했는데 막상 사회에 나가서 보면 취업도 제대로 안되고 하니까 결국은 전체 사회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지게 되거나 거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게 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것이 큰 우려입니다.

따라서 환경부뿐만 아니라 환경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말씀 드렸듯이 현실적인 문제는 기술 인력들이 우대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요.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저는 국회 오기 전에 포항제철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기술자는 아니고 인사과에만 있었는데, 입사해서 박태준 회장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입사해서 존경하게 되었는데, 그 분은 정말로 기술인력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때는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할 정도로 기술인력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셨는데 실질적인 예를 들면 그분은 사무직보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들에게 급여를 30%를 높게 줌으로써 기술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셨습니다.

또한 85년도에 한번은 현장을 둘러보신 후 매우 화를 내면서 제철소 본사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들의 책상을 전부 다 치우라고 지시하셨는데, 이유인즉슨 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할 일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 업무인데, 현장을 둘러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지시만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여름에도 본부사무실에는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현장 근무자와 똑같이 긴팔과 군화 같은 안전화를 신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진짜 고생하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이므로 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똑같이 고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과 실천으로 기술자들을 우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기술자들을 우대하지 않으면 우리사회가 발전하기 어렵고 국가가 발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 환경부 주요자리는 행정직 출신

실질적으로 조금 더 앞을 나아가서 얘기하면 환경부가 환경인력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환경부의 중요한 자리는 행정직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안을 잘 들여다보면 주요 보직은 다 행정직들이 차지하고 있고 매 맞는 자리는 기술진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 육성이 환경산업 발전 당긴다

사석에서 하는 말로 환경부의 인사담당 권한을 가진 총무과장을 기술직으로 바꿔야 기술직에 대한 대우가 좀 나아지지 않겠냐는 말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기업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해서 교육에 있어서 인재를 개발하는데 많은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부도 이를 참조를 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환경기술인력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어야만 전문기술인력이 양성되고 환경산업도 육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쌓으면 뭐하냐 마땅히 갈 곳도 없고 가봐야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한다는 식의 자조 섞인 탄식이 나오지 않아야 우리 환경산업이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할 것이라 봅니다.

토론4 - 황흥규 교육인적자원부 조정1과장

전문기술인력 육성은 정부투자 확대로부터

이 자리에서 논의된 토론내용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백규석 과장님이 토론시간에 두들겨 맞으면서 교육부만 매 맞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도 매를 맞는구나, 하고 측은지심과 동지애를 느꼈습니다.

저희도 외부에서 교수님들을 만나면 엄청 매를 맞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 충분히 만족을 못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아예 환경부나 교육부를 없애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격의 대상이 있으니 공격을 하는 것 같고, 공격대상이 없으면 공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쨌든 매집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국가전략분야를 인력양성종합계획을 저희 교육부가 주도를 하면서 사실 저희가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기술개발, 산업개발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정부의 R&D 정책이나 산업기술정책에서 보면 사람에 대한 정책이 없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신기술분야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고등인력 양성은 저투자 구조

그래서 각 부처로 하여금 IT, BT, ET, CTNT, ST, 이런 곳에서 사람에 대한 정책도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환으로 그전부터 환경부가 해왔지만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력양성부분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변명을 하자면 우리나라의 인력양성 즉 고등인력양성은 저투자 구조입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것이 높은 수준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인력양성에 있어서 대학교육을 많이 비판하지만 우리 대학교육은 학부모의 수업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러다보니 학교의 기본적인 운영의 비용도 부족한 편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통해 인력양성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우리 산업체에서는 인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비용들은 기업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상당부분을 인력양성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고 인력양성에 기업이 참여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고 게다가 IMF이후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수요라는 것은 상당히 바뀌는데 그에 따라 교육과정을 바꾸고 그것에 따라 교육기자재 실습시설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교육재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노력이 게을리 한 것은 반성을



교육부는 기술인력의 재교육에 있어서 기업체도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대학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설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계약에 의한 학과설치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학과정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서 환경기술인 연합회와 같은 단체에서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환경기술분야의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밝다는 시그널을 정부가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다른 부처와 협력하여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산학협력에 의한 인력양성, 기술개발 투자가 그것입니다. 학연산석·박사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이 공동으로 석사, 박사과정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틀이 있고, 앞으로 계약에 의한 학과설치라는 것이 있는데 기업의 기술인력의 재교육에 있어서 기업체도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대학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설해서 공동으로 과정을 운영하는 계약에 의한 학과설치 이것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학과정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서 환경기술인과 같은 협회에서 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기업연구소가 대학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협력연구소제도인데 지금은 대학에 기부체납을 하고 나중에 기업이 그것을 무상사용 허가 받는 식인데 아예 기업체가 자기 소유로 건물이나 시설을 하고서 대학내에 들어가서 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습니

다. 그런 연구소 운영을 통해 대학의 인력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학협력이 잘 되려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자격제도도 민간자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국가자격은 기본적으로 관료제적인 특성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자격을 국가 공인 제도로도 도입을 했고 교육부에서는 국가공인에 앞서서 우수 민간 자격을 교육부 장관이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으나 저희로서도 책임이 많기 때문에 환경인력이 공급 과잉상태나 차츰 해결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환경기술분야의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밝다는 시그널을 정부가 줘야 하지 않을까 장준영 회장님께서도 환경부를 때리지 말고 기획예산처를 때리셔서 기획예산처가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